

주간 WEF 브리프 · WEF 신호로 읽는 산업·정책 · 9호

유럽 구조개혁은 어디까지 왔는가

WEF 유럽 경쟁력 보고서 · 네 개의 축으로 바라본 유럽

WEF가 9월 9일 발표한 유럽 경쟁력 연차보고서 첫 판은 본문에서 “이제 과제는 진단이 아니라 이행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드라기·레타 보고서로 진단이 끝났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청정에너지와 산업 · 지능의 시대 · 금융시장 · 전략적 동맹** 네 축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을 모았습니다. 네 장이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 “유럽의 제약이 자본·기술·아이디어의 부족인 경우는 드물다. 이미 가진 강점을 배치하는 속도와 조율이 제약이다.” 그리고 그 속도에 숫자를 붙였습니다 — 드라기 권고 가운데 이행된 것은 15.7%입니다. 이행 주체를 나눈 표에서는 권고의 20%가 기업·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몫으로 분류됐습니다.

드라기 권고 이행 15.7%

가계 저축 37조 유로

기업 주도 가능 권고 20%

진단에서 이행으로

2024. 9.

드라기
「유럽 경쟁력의 미래」
— 권고 약 380건

2025.

진단 합의
가 선 뒤 LGC 플랫폼 출범

2026. 현재

드라기 권고
이행 15.7%
(60건) — 1장이 적은 값

2026. 1. 26.

함부르크 북해 정상회의,
10개국
해상풍력 공동투자계획 서명

2026. 9. 9.

WEF
유럽 경쟁력 연차보고서
발간 — 표제지 표기
First Edition

붉은 항목은 원문이 「진행이 느리다」의 근거로 적은 수치다(III장 6면). 결론은 같은 이행 정도를 「3분의 1 미만」이라는 어림으로 적었다(II장 4면).

이 브리프에서 다루는 것

- 1 원문의 발행 주체와 구성 · I장
- 2 원문의 진단과 네 개의 결론 · II장
- 3 청정에너지와 산업 · III장 / 지능의 시대 · IV장
- 4 금융시장 · V장 / 전략적 동맹 · VI장
- 5 원문에 한국이 나오는 자리 · VII장



원문 보고서 표지 · World Economic
Forum
2026년 9월

이벤트 요약

발행일자	2026. 9. 17. (목)	이 회의 형식	원문 소개 · 풀이
원문	World Economic Forum 「Leaders for European Growth and Competitiveness」 First Edition (2026년 9월, Annual Report 123쪽). 1장 Accenture·2장 McKinsey·3장 Oliver Wyman 협업. 2025년 출범한 LGC 플랫폼의 첫 연차보고서다		

15.7%

원문이 적은 **드라기 권고 이행률**. 권고 약 380건 중 **60건**이다 (III장 6면)

20%

드라기 권고 가운데 **기업·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몫**(77건). 공공·민간 공동은 15%(57건) (IV장 8면)

37조 유로

2023년 유럽 가계가 보유한 **저축**. 원문은 문제가 자금이 아닌 **전달 장치**에 있다고 적었다 (V장 9면)

1조 4,000억 유로

연간 추가 투자 필요액으로 원문이 「**최근 추정**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적은 값. 드라기 2024년 추정은 연 8,000억 유로였다 (V장 9면)

이벤트 핵심 3줄

- 원문은 진단서가 아닌 **이행 점검표**다. 드라기·레타 보고서로 진단이 끝났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서론에 두고, 3장은 같은 말을 “**이제 과제는 진단이 아니라 이행이다**.”로 되풀이한다. 그래서 새 처방을 내놓는 대신 **이미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이것을 유럽 전체로 어떻게 확대하나”를 묻는다.
- 네 개 장이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청정에너지와 산업, 지능의 시대, 금융시장, 전략적 동맹 — 결론은 “**유럽의 제약이 자본·기술·아이디어의 부족인 경우는 드물다. 이미 가진 강점을 배치하는 속도와 조율이 제약이다**.”이다. 1장은 관심을, 2장은 여건과 속도를, 3장은 전달 장치를, 4장은 묶어 내는 힘을 각각 그 자리로 지목했다.
- 기업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몫을 **숫자로 적었다**. 원문은 드라기 권고 약 380건을 이행 주체별로 나눴다 — EU 입법·규제 40%(153건), 국가정부 25%(96건), **기업·산업 주도 20%(77건)**, 공공·민간 공동 15%(57건). 그리고 “**공공정책만으로는 이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문장을 네 장을 관통하는 메시지로 결론에 실었다.

이 호를 왜 보나 — 원문에서 도내 기업에 걸리는 자리 | 원문은 미국·중국을 뺀 유럽의 최대 교역 상대 여섯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을 꼽았다(VI장 11면). 연 2조 유로인 유럽 공공조달(IV장 8면)에 「**유럽산**」 요건을 붙이는 **산업가속법안**(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 안)이 나왔고, **자유무역협정 상대를 포함할지**를 원문은 핵심 질문으로 남겨 두었다(VII장 13면). 핵심원자재 「**강화된 무역협정**」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정제·가공 역량 투자가 들어 있다(VI장 12면).

목차

- I. 원문의 발행 주체와 구성 · 3면
- II. 원문의 진단과 네 개의 결론 · 4면
- III. 청정·경쟁력 있는 에너지와 산업 · 1장 · 5~6면
- IV. 지능의 시대 · 2장 · 7~8면
- V. 금융시장 · 3장 · 9~10면
- VI. 전략적 동맹 · 4장 · 11~12면
- VII. 원문에 한국이 나오는 자리 · 13면
- * 용어 · 출처 · 14면

읽는 법 — 각 장은 원문의 장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원문 인용은 국문으로 옮기고 큰따옴표 안에 두었다. 이 브리프의 시사점은 VII장에만 있다 — 앞 장의 회색 주석은 범위·단서와 도내 값 대조다.

I 원문의 발행 주체와 구성

2026년 9월 9일 세계경제포럼이 「**Leaders for European Growth and Competitiveness**」 연차보고서 첫 판을 냈다.

123쪽이며, 같은 이름의 플랫폼(이하 LGC — 기업·시민사회·EU 기관·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이 첫째 작업을 묶은 것이다.

누가 만들었나

구분	원문이 적은 내용
플랫폼	2025년 출범. EU·회원국 정책결정자, 기업·시민사회 리더, 주제 전문가를 모아 네 개 축에서 진전을 만드는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 이후 유럽 각국 수도에서 열린 회의를 이어 가며 리더 100명 가까이 가 참여하는 규모가 됐다
공동의장 11인	유럽집행위원회 고위인사 4인(금융서비스·저축·투자 동맹·기후·넷제로·국제 파트너십·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 파리국제관계대학원 학장 / 기업 최고경영자 5인 — SAP·도이체방크·바텐팔·유미코어·APG

원문 5쪽 BOX 1. 회원 규모는 유럽 내 고용 **120만 명**(83개사) · EBITDA **1,660억 유로**(56개사, EU 국내총생산의 약 1%) · 2025년 연구개발 **190억 유로**(28개사)이며 **세 통계의 모수가 서로 다르다** — 원문이 각주로 밝힌 그대로다. 협업사는 **1장 Accenture·2장 McKinsey·3장 Oliver Wyman**으로 각 장 표제지에 「In collaboration with」로 표기됐고, 그림 다수의 출처도 McKinsey다.

원문의 분량 배분

네 축의 본문 분량 (쪽, 전체 123쪽)



나머지 23쪽은 표지·서문·요약·서론(1~7쪽), 결론(108쪽), 미주 278개와 기여자 명단(109~123쪽)

어디서 나왔나 — 드라기·레타 보고서 다음의 자리

☞ 원문이 자기 위치를 적은 문장 (서론 6쪽)

- “드라기와 레타 등의 보고서가 유럽의 주요 구조적 과제에 대해 **폭넓은 합의**를 만들어 놓았다. 처방은 익숙하다... **이제 문제는 유럽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다.**”
- “LGC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이미 확립된 진단을 다시 들추는 대신 **이행에 초점**을 둔다.”

* 인용은 이 브리프가 원문을 국문으로 옮긴 것이며 생략은 **말줄임표**로 표시했다. 이 호의 표제가 말하는 「구조개혁」은 위 인용의 「주요 구조적 과제」에 대한 개혁이며, 「어디까지」에 해당하는 값이 III장 6면의 15.7%다.

II 원문의 진단과 네 개의 결론

☞ 요약이 스스로 내건 한 줄 (원문 4쪽)

- “도구와 모델은 있다. 유럽에 필요한 것은 지역 전체의 장기 번영을 여는 **실행의 규모**다.”
- “유럽은 청정에너지 기술이 **모자라지 않다... 자본도, 창업 역량도 모자라지 않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초기단계 기업이 많다. 외부 위험을 다룰 외교·경제 수단도 **없지 않다**. 유럽이 거듭 어려워하는 것은 **경쟁자들이 이미 내는 속도로 이 강점들을 배치하는 일**이다.”

요약이 네 축에 각각 적은 것 (원문 4쪽)

- **청정·경쟁력 있는 에너지와 산업** — 이미 성숙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규모 있게 배치하고 최종 용도의 전기화를 앞당긴다. 청정연료는 보완 수단이며, **인허가를 빠르게·전력망 투자를 두텁게·장기 투자 신호를 믿을 만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 **기술과 혁신** — 자본 접근을 개선하고 시장 파편화를 줄이고 기술 도입을 앞당겨 역내 **초기단계 기업 약 4만 개**를 키운다.
- **금융시장** — 자본시장을 깊게 하고 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리테일 참여를 늘려 풍부한 민간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바꾼다.
- **대외 파트너십** — 무역협정·글로벌게이트웨이·경제안보 수단을 더 조율해 써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투자를 동원하고 핵심 의존을 줄인다.

요약(4쪽)은 둘째·넷째를 「기술과 혁신」·「대외 파트너십」으로 적었고 본문 장 제목은 「지능의 시대」·「전략적 동맹」이다. 같은 네 축이다.

결론이 적은 네 가지 (원문 108쪽)

순서	원문이 적은 결론
첫째	청정에너지·산업 전환에는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와 공급 다변화 가 필요하다 — 최근의 지정학적 충격이 수입 의존의 비용을 키웠다
둘째	초기단계 기업과 기술기반을 키우는 일은 27개 관할권에 걸친 파편화를 줄이고 공동조달 같은 집합적 수단을 쓰는 데 달려 있다 — 어느 회원국도 혼자 떠받칠 수 없는 시장 을 만드는 방식이다
셋째	깊은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바꾸려면 증권화·리테일 참여·연금 강화 로 「금융 연속체」를 완성해야 한다 — 증권화 는 대출을 묶어 투자자에게 파는 증권으로 바꾸는 일이다
넷째	개방 무역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전략적 의존을 줄이려면 무역협정·역외투자·표적 경제안보 조치 를 결합한 더 통합된 대외경제정책이 필요하다

☞ 네 장을 관통한다고 원문이 적은 문장 (결론 108쪽)

- “유럽의 제약이 자본·기술·아이디어의 부족한 경우는 드물다. 이미 가진 강점을 배치하는 속도와 조율이 제약이다.”
- “네 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 **공공정책만으로는 이 결과를 만들 수 없다**. 지속적인 진전은 정부·기업·투자자·시민사회·기관 사이의 꾸준한 협력에 달려 있으며, 각자가 쥐고 있는 **해법의 뒀만큼 움직여야 한다**.”

☞ 같은 이행 정도를 원문이 두 가지로 적었다

- dragged 권고 이행 정도를 1장은 「**15.7%(60건)**」로, 결론은 「**3분의 1 미만**」으로 적었다. 1장은 출처를 dragged **옵서버토리로** 밝혔고 결론은 출처를 적지 않았다. 두 진술은 어긋나지 않는다 — 15.7%는 3분의 1 미만에 든다. 이 브리프는 출처가 적힌 1장 값을 쓴다.

III 청정·경쟁력 있는 에너지와 산업

원문 1장(8~32쪽, Accenture 협업). 이 축에는 민간·공공·비영리 **43개 조직**과 EU 회원국 인사가 참여했다. 1장의 논지는 한 줄로 적혀 있다 — “유럽의 답은 에너지·산업 전환을 늦추는 데 있지 않고 앞당기는 데 있다.”(원문 9쪽)

☐ 기술은 있고 관성이 남았다 (원문 9쪽·32쪽)

- “유럽에는 이미 미래의 회복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체계를 만들 핵심 요소가 있다 — 선도 기업, 연구소, 혁신가, 그리고 폭넓은 공적 지원이다.”
- “필요한 기술은 이미 많이 갖춰져 있다... 재생에너지·전기화·에너지저장·청정연료와 신형 저탄소 기술이 **점점 상업적으로 성립한다**. 과제는 **체계에 쌓인 관성을 넘는 일**이다.”

즉시 착수할 해법으로 꼽은 여섯 가지

번호	원문이 적은 해법
1	산업 전기화를 앞당긴다 — 원문은 이를 「유럽 경쟁력 강화의 가장 영향이 큰 기회 중 하나」로 적었다
2	청정연료 도입을 확대한다 — 직접 전기화가 아직 기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공정·수송·장거리 용도의 보완 수단으로 두었다
3	국경 간 청정에너지 회랑을 우선한다 — 산업 클러스터를 잇는 회랑도 여기에 든다
4	인허가를 간소화·정합화한다 — EU 공통 기준선과 상호인정을 도입하는 방식
5	금융 위험을 덜고 자본비용을 낮춘다 — 장기 가격신호 장치로 보증, 전력구매계약(PPA), 차액계약(CfD), 수요 결집을 들었다
6	삼자 플랫폼으로 수요·공급·지원 정책을 맞추고 청정기술 배치를 앞당긴다 — 구매자·산업·정부 세 축을 한자리에 놓는 조율 장치를 가리킨다

원문 9쪽. 즉시 착수 가능성·영향력·공공-민간 공동행동 필요성을 기준으로 여섯을 골랐다고 적었다. 이 축은 **19개 해법**을 먼저 추진 뒤 그중에서 골랐다(원문 18쪽).

1장이 근거로 든 수치

- 전기화 **23% → 46%**(2040년) — 산업·건물·수송의 전기화를 국산 청정에너지와 함께 끌어올리면 EU의 화석연료 수입액을 연 **2,600억 유로** 줄일 수 있다.
- 풍력·히트펌프 분야 세계 혁신 기업 가운데 **40%**가 유럽 기업이고 전해조는 30%이며, 전력망 설비에서는 유럽 기업이 세계를 선도한다.
- 한 바이어 연합(공동구매 컨소시엄)은 청정제품 수요를 연 **160억 유로** 가량 모았고 2021년 이후 **160건 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대륙 전체로 넓히면 연 **1,000억 유로** 가량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원문은 추정했다.
- 공동관심사업(PCI)으로 지정된 에너지 인프라는 인허가가 약 **3년 6개월에 끝난다** — 국가 절차로는 흔히 7~10년이다(원문 28쪽). PCI는 유럽 에너지 인프라 규정(TEN-E) 틀에서 지정하는 역내 연계 사업이다.
-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이 **2022년 45%에서 2025년 13%**로 낮아졌다 — 2022년 EU가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려 내놓은 에너지 계획 REPowerEU의 결과로 적었다.

III 청정·경쟁력 있는 에너지와 산업

사례 하나 — 북해 해상풍력 공동투자계획(해법 6)

항목	원문이 적은 값
서명	2026년 1월 26일 함부르크 북해 정상회의, 10개국 서명
규모	2027년까지 기함 사업 20GW 식별 · 2031~2040년 연 15GW 건설
비용	2040년까지 균등화발전원가(발전 단가) 30% 인하(2025년 대비). 원문은 이 인하에 연 120억~280억 유로의 절감 잠재력을 두었다
인력	2031년까지 총 인력 18만 7,000명 목표 · 북해 지역 일자리 14만 개 · 북해 지역 담당 비중 75%

원문 31쪽 그림. 출처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 「Joint Offshore Wind Investment Plan for the North Seas」(2026). 절감액은 원문 30쪽. 원문은 이 방식(삼자 플랫폼)이 이미 해상풍력·에너지저장에 쓰이고 있고 전력망 인프라와 산업 전기화 기술로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법에 원문이 붙인 실제 사례 (원문 27~29쪽)

해법	원문이 적은 사례와 값
인허가 간소화 (해법 4)	TEN-E 틀의 공동관심사업(PCI)으로 지정되면 인허가가 약 3년 6개월에 끝난다 — 국가 절차로는 흔히 7~10년이다. 영국의 국가중요인프라(NSIP) 체계는 주요 에너지 인프라 승인을 약 7년에서 약 2년 6개월로 줄였다. 독일은 EU 긴급규정(2022/2577)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압도적 공익」으로 분류하고 저위험 구역의 종 보호 규정을 완화해 연간 육상풍력 허가 용량을 두 배 넘게 늘렸다(2023년 7.6GW)
금융 위험 완화 (해법 5)	위험완화로 재생발전 사업에서 연 약 124억 유로를 아낄 수 있다고 원문이 추정했다. 사례로 영국 계통운영자의 장기계약, 독일 H2Global 경매(2025년 2차 25억 유로), 독일 수소상각계정(KfW 240억 유로), 유럽투자은행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보증 시범사업 5억 유로를 들었다

1장 요약이 적은 것 (원문 32쪽)

- 위기는 되풀이해서 구조 전환의 촉매가 됐다 — 1970년대 오일쇼크는 새 에너지 전략과 산업 역량을 앞당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은 유럽이 대규모 교란 앞에서 속도와 조율을 낼 수 있음을 보여 줬다고 적었다. 2026년 중동 분쟁과 연계된 에너지 충격이 수입 화석연료 의존을 줄일 긴급성을 다시 키웠다는 문장이 뒤따른다.
- 다만 「진행이 느리다」고 적었다 — 드라기 옴서버토리 기준 이행 15.7%(60건)이며 그 60건 가운데 에너지 1건·청정기술 7건·에너지 다소비 산업 11건을 꼽았다.
-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정책의 야심만큼 중요하다고 적었다 — 1974년 메스메르 계획과 REPowerEU를 예로 든 대목이다.

☞ 정치 주기를 넘는 장기 비전 (원문 32쪽)

- “유럽이 청정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을 밀고 나가는 데는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 제도적 조율, 그리고 정치 주기를 넘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장기 비전이 필수적이다.”

* 프랑스 원자력 계획(메스메르 계획)은 원문이 1970년대 위기 대응의 역사적 사례로 든 것이며 발전원에 대한 이 브리프의 판단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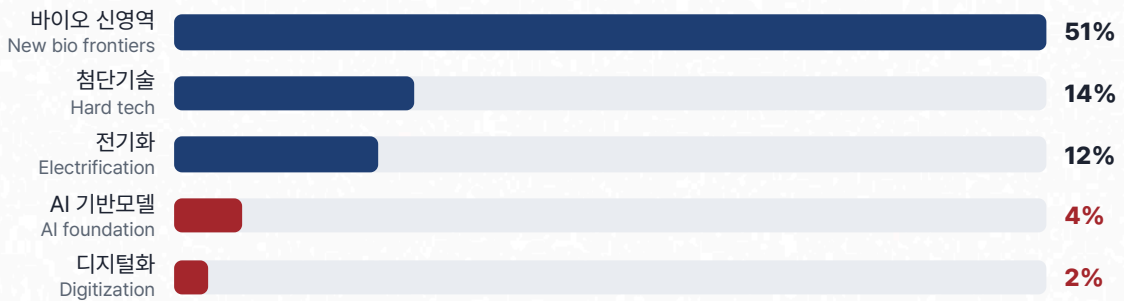
IV 지능의 시대

원문 2장(33~55쪽). 2장의 질문은 둘이다 — 유럽의 초기단계 기업이 어떻게 유럽 안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클 수 있나, 그리고 AI와 프린터 기술의 창출·도입을 어떻게 앞당기나. 2장은 유럽 기업의 생산비가 중국 등 선도 경쟁자보다 대체로 40% 넘게 높다고 적고, 비용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혁신으로 이겨야 한다는 전제를 세운다.

2장이 적은 유럽의 재료 (원문 35~36쪽 2장 그림 2) — 가계 연간 저축액은 EU 약 1조 4,000억 유로 대 미국 약 6,000억 유로인데, 그 가운데 자본시장에 들어가는 비중은 EU 36% 대 미국 79%다. 이공계 비중(고등교육 재학생 중)은 EU 약 27%-미국 약 20%, 기술인력은 미국→유럽 월 1,426명 대 유럽→미국 1,385명으로 처음으로 방향이 뒤집혔다(차이는 월 41명). ▲ 모수가 통일돼 있지 않다 — 원문 본문(35쪽)은 '금융자산의 약 3분의 1, 위 36%는 '가계 저축 대비'다. 출처 표기는 Eurostat · MGI · 미국 국립과학재단 · 유럽중앙은행 · EFPIA · ASML · Bruegel.

분야별 세계 설비투자·연구개발 중 유럽 몫 (원문 37쪽 2장 그림 3, 2025년)

2025년 · 해당 분야 세계 설비투자·연구개발 대비 % (원문은 다섯 값 모두에 「약」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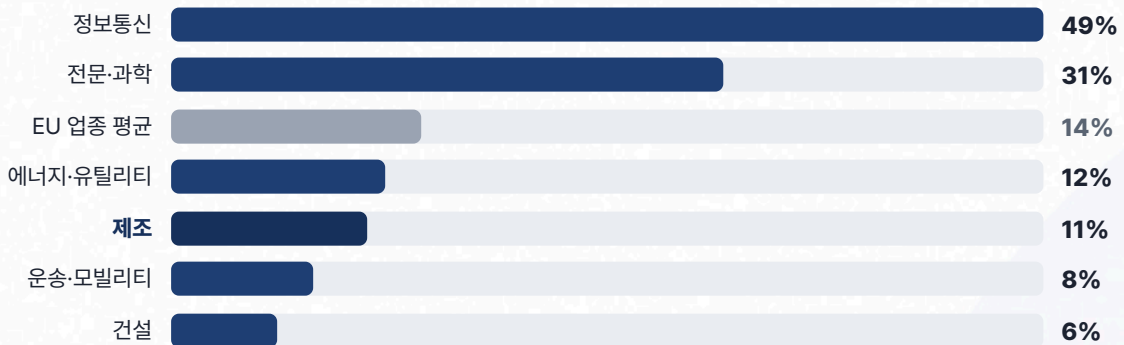


원문 37쪽 그림 3 · 출처 표기는 McKinsey · WEF · MGI(2024) · PitchBook

원문은 각 분야 간에 다른 모수의 값을 함께 적었다 — 첨단기술 간의 극자외선 노광 세계 점유 100%(괄호에 “ASML 독점”)·로봇 24%, 바이오 세계 매출 46%, 전기차 매출 20%·배터리 11%, AI 기반모델 간의 세계 반도체 매출 8%. 위 막대는 설비투자·연구개발 기준이고 이 값들은 점유율·매출 기준 — 나란히 놓을 수 없다.

유럽 기업의 AI 도입률 (원문 45쪽 2장 그림 8)

AI 기술을 쓰는 EU 기업 비중 (2024년, 종업원 10인 이상)



출처 표기는 Eurostat(2024) 기업조사 · 원문 44쪽은 Apply AI 전략 대상을 11개 업종으로 적었다

도내 값에는 같은 축이 없다 — 위 도입률 막대에 견줄 항목을 2023년 경기도 반도체산업 실태조사에서 찾지 못했다. 기업 구성에 해당하는 값은 있다 — 경기도 반도체 기업은 93.5%가 장비·부품 업종, 전담 반도체 인력 5인 미만이 76.7%, 기업연구소 보유가 48.3%였다(표본 1,000개 업체).

☞ 여건과 속도 (원문 34쪽)

- “유럽에 없는 것은 자원이 아니라 알맞은 여건과 빠른 실행이다.”

IV 지능의 시대

여덟 개 해법 — 2장 그림 4의 목록 (원문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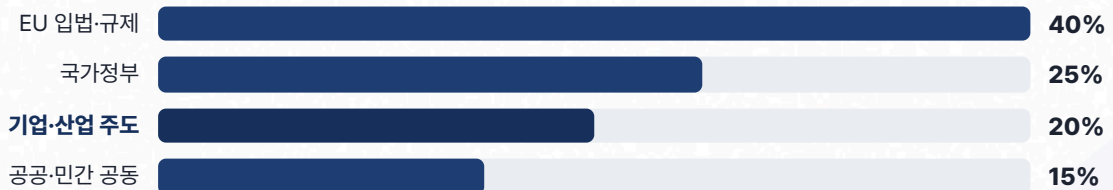
확대·혁신 생태계 만들기	AI·기술의 창출과 배치 앞당기기
1. 성장단계 자금 격차를 메운다	5. 공공조달로 혁신을 끌어낸다
2. 28번째 제도를 만들어 유럽 단위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6.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공유를 연다
3. 합병·협력 규칙을 개혁해 글로벌 챔피언을 키운다	7. 주권적이고 회복력 있는 AI·기술 인프라를 짓는다
4. 승인을 앞당기고 규제를 단순화한다	8. 역동적인 노동·인재 시장을 만든다

출처 표기는 McKinsey & World Economic Forum(2025) 「Europe in the Intelligent Age: From Ideas to Action」. 「28번째 제도」는 27개 회원국 법제와 별도로 두는 선택 가능한 유럽 단위 회사법 틀을 가리킨다.

창업·투자·조달 · 2장이 든 수치

- 유럽 유니콘의 30% 가까이가 역외로 옮겨 간다 — 원문은 그 이유의 일부로 27개 관할권을 넘는 확장이 단일 관할권보다 느리고 비싸다는 점을 적었다.
- 신규 유니콘이 2023년 7개에서 2025년 27개로 늘었고, 활동 중인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은 2년 사이 5개에서 10개가 됐다. 벤처투자 총액은 연 570억 유로에서 660억 유로로 올랐다 — 원문 40쪽 그림은 2024년 630억 달러다.
- 유럽 공공기관의 조달 지출이 연 2조 유로로 EU 국내총생산의 약 14%이며, 원문은 이를 「대륙 전체 벤처캐피털 기반을 압도하는 규모」로 적었다. 유럽은 공동 공공조달로 첫 양자컴퓨터를 배치하고 있다.
- 일곱째 해법의 진척으로 유럽에 대한 계획된 외국인직접투자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40% 늘었다는 점과, ASML을 중심으로 한 아인트호벤 생태계를 키우는 25억 유로 규모 Project Beethoven을 들었다.

드라기 권고 약 380건을 누가 이행하나 (원문 54쪽 2장 그림 11)



건수로는 153 · 96 · 77 · 57건 · 원문 54쪽 그림 11, 출처 표기는 Draghi(2024) · McKinsey 분석

원문이 기업·산업 주도 칸에 적은 예시 — 산업 컨소시엄을 통한 국경 간 표준화, AI 도입과 배치, 근로자 재교육 투자, 데이터 공유, 공급망 다변화, 기업 R&D 확대. 공공·민간 공동 칸에는 IPCEI(여러 회원국이 함께 공적 지원을 넣는 대형 산업·기술 사업), 전략 허브 공동투자, 상용화 전 조달, 혁신 파트너십이 있다. 나머지 두 칸은 28번째 제도·합병 지침·Solvency II·AI법 이행(EU)과 전력망 인허가·교육·창업비자·R&D 세제(국가정부)다.

㉠ 같은 대목의 원문 문장 (원문 54쪽)

- “많은 개혁이 유럽·각국 정책결정자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만, 기업은 단독으로도 AI에 투자하고, 혁신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길러내고,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성장원을 찾을 수 있다.”

V 금융시장

원문 3장(56~89쪽, Oliver Wyman 협업). 3장은 문제를 자금이 아닌 **전달 장치**에서 찾는다(원문 57쪽).

필요한 돈과 있는 돈

구분	원문이 적은 값
필요한 돈 (드라기 2024)	2025~2030년 연 8,000억 유로 추가 투자 — 청정에너지 전환·디지털 인프라·국방
필요한 돈 (2026년 추정)	연 1조 4,000억 유로 까지 갈 수 있다 — 국방 수요 증가, 글로벌 경쟁 심화, 사회·환경 과제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있는 돈 (3장 서두)	2023년 유럽 가계가 보유한 저축 37조 유로
있는 돈 (3장 본문)	2024년 유럽 가계 저축 39조 4,000억 유로 . 가계 자산의 약 32% 가 현금·은행예금으로, 미국 가계(13%)의 두 배를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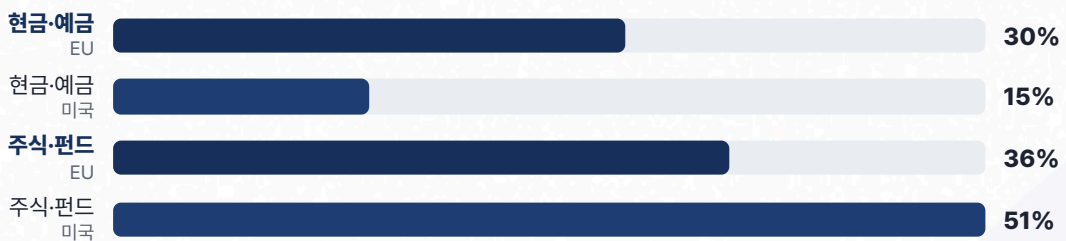
37조 유로(2023년, 3장 57쪽)와 39조 4,000억 유로(2024년, 3장 본문 63쪽)는 기준 연도가 다른 값이며 원문이 두 곳에 각각 적은 그대로다. 원문 57·59·60·63쪽. **3장 그림 1**은 두 추정치를 **에너지 전환·디지털·국방·혁신·사회·환경** 항목으로 쪼갰으나, 이 브리프는 **총액과 항목 목록만 옮기고 항목별 배분은 옮기지 않는다** — 항목과 값의 1:1 대응을 확정하지 못했다.

☐ 문제는 전달 장치에 있다 (원문 57쪽·89쪽)

- “유럽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모자라지 않다... 문제는 전달 장치에 있다. 미래 성장을 만들어 낼 기업·인프라·기술에 맞는 자본이 너무 적다.”(57쪽)
- 3장 요약은 이렇게 적었다 — “**이제 과제는 진단이 아니라 이행이다.**”(89쪽)

가계 자산이 어디에 놓여 있나 (원문 84쪽 3장 그림 16)

가계 금융자산 구성 (2024년 말, %)



나머지 — 연금·보험 EU 28%·미국 28%, 채권 3%·4%, 기타 4%·2% / 원문 본문(63쪽)은 현금·예금을 **32%·13%**로 적었다

나라별로 크게 갈린다 — 2024년 **그리스·폴란드·슬로베니아·불가리아** 가계는 자산의 **70% 이상**을 예금·현금으로 갖고 있고 **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는 **30% 미만**이다(원문 85~86쪽). 출처 표기는 Eurostat · 미국 연준 · Oliver Wyman 분석.

3장이 든 세 개의 지렛대 — 증권화(원문은 유럽 시장이 아직 덜 발달했다고 적었다) · **연금**(제도 설계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를 영국 사례로 들었다) · **리테일 참여**(원문이 적은 방식은 상품을 통일하기보다 **규칙을 단순하게, 유인을 눈에 보이게, 경로를 닿기 쉽게** 하는 쪽이다). 연금과 리테일 참여의 사례는 다음 면에 있다.

V 금융시장

원문이 미국과 견준 대목 (원문 63~64쪽·85쪽)

구분	원문이 적은 값
기업 자금조달	유럽 은행이 비금융기업 부채성 자금조달의 65% 넘게 를 낸다. 미국은 약 35% 다
주식시장	2024년 말 EU 시가총액은 EU 국내총생산의 약 70% , 미국은 약 270% 다. 금액으로는 EU 12조 7,000억 달러 대 미국 49조 달러 (3.9배)이고, 미국 상위 7개사만 15조 7,000억 달러 다
예금과 지수	유로존 은행예금 평균금리는 2015~2025년 0.94% (누적 약 9.8%)였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30% 가까이 올랐다. EURO STOXX 50은 같은 기간 연평균 순수익률 약 9.1% (누적 약 140%)였다
예금 전환 추정	유럽중앙은행 추정 — EU 가계가 미국 가계의 예금 비중을 따라가면 최대 8조 유로 , 연 약 3,500억 유로 가 시장 기반 투자로 풀릴 수 있다

나라별 사례 — 연금과 리테일 참여

나라	제도	원문이 적은 내용
영국	직장연금 자동가입 (2012)	가입을 ‘신청’에서 ‘탈퇴 선택’ 으로 바꾸자 약 90%가 그대로 남았다 . 수백만 명이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고 연간 기여금은 1,500억 파운드 에 이른다
아일랜드	자체 자동가입 (2026년 도입)	신규 연금 가입자 약 75만 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 원문이 서론에서 “한 나라의 시도가 다른 나라의 설계도가 된다” 고 적은 대목의 예다(7쪽)
스웨덴	ISK (투자저축계좌)	양도차익·배당·인출을 따로 과세하는 대신 계좌 평가액 기준 표준 연간과세 로 바뀌 행정 마찰을 크게 줄였다. 2025년 소득분 기초공제 15만 크로나 (약 1만 3,700유로), 2026년 1월부터 30만 크로나 (약 2만 7,350유로)
폴란드	OKI (2025년 8월 발표)	임의 가입 개인투자계좌. 10만 즈워티 (약 2만 3,250유로)까지 비과세이며 그중 2만 5,000즈워티 (약 5,800유로)는 예금·소액국채 같은 저축 부분에 넣을 수 있다. 원문은 이를 예금 중심 저축 문화 를 가진 나라가 같은 개념을 자기 시장 구조에 맞게 고친 예로 적었다

원문 71~89쪽. 유로 환산액은 원문이 함께 적어 둔 값이다.

국경 간 마찰을 줄이는 제도 하나

- **EU FASTER 지침** — 2024년 12월 채택. 국경 간 투자자의 **원천징수세 환급**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회원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내법에 옮기고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 이제는 의지와 실행의 문제 (원문 89쪽)

- “유럽에는 자기 미래를 스스로 조달할 저축과 기관과 재간이 있다. 그것을 시민을 위한 투자와 성장과 **안전**으로 바꿔 내느냐는 이제 정치적 의지, 규제 실용성, 조율된 실행의 문제다.”

* 이 면의 수익률·세제 값은 원문이 유럽 제도를 설명하며 적은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

VI 전략적 동맹

원문 4장(90~107쪽). 무역·투자·산업정책·경제안보를 하나의 대외경제정책으로 묶는 것이 4장의 주제다. 원문은 4장의 목표를 이해가 맞는 곳에서는 협력을 깊게 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전략적 취약성을 줄이는 일로 적었다(원문 107쪽).

교역·투자의 배경 숫자 (원문 92~93쪽)

구분	원문이 적은 값
미국	EU-미국 관계는 2025년 세계 상품·서비스 교역의 30% 가까이, 세계 국내총생산의 43%를 차지한다. EU의 대미 상품수출은 2024년 5,356억 유로에서 2025년 5,549억 유로(+3.6%)로 늘었으나, 독일은 2025년 1~11월 대미 수출이 9.4% 줄었다(특히 자동차·기계·화학의 관세 부담 상승). 원문이 이 대목에서 꼽은 것은 개별 관세보다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 안정된 관세에는 적응할 수 있으나 계속 바뀌는 조치는 계획비용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중국	2025년 EU의 대중 수출은 6.5% 줄고 수입은 6.4% 늘었다. 상품수지 적자는 약 3,600억 유로(전년비 약 20% 증가)이고 2026년 1분기만 950억 유로에 육박했다. 팬데믹 이후 중국의 대EU 수출은 40% 넘게 늘었다. 원문은 이 증가의 동인을 내수 부진, 대규모 산업지원(IMF 추정 국내총생산의 약 4.4%, 연 약 8,000억 달러), 첨단제조 경쟁력의 조합으로 들었다
투자 흐름	2025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14% 늘어 1조 6,000억 달러(추정)가 됐고 EU 유입은 56% 증가했다. 다만 증가분 상당이 데이터센터 그린필드였고, 데이터센터가 세계 그린필드 투자액의 5분의 1 넘게(2,700억 달러 초과)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전통 제조 등 다른 대부분 업종의 투자는 줄었다
반대 방향 의존	일부 핵심 제품·산업 투입재에서 미국·중국에 수입의 80% 이상을 EU에 의존한다. 인슐린, 의약품 중간체, 농업용 특수기계를 예로 들었다

원문 92~93쪽. 원문은 유럽의 목표를 "탈동조화가 아니라 표적화된 위험 완화"로 적었다.

유럽의 무역전략 네 갈래 (원문 94쪽)

번호	원문이 적은 내용
1	교역 상대 다변화 — 미국·중국을 뺀 유럽의 최대 교역 상대로 브라질·인도·일본·멕시코·대한민국·튀르키예를 꼽았다. 최근 1년 사이 인도·인도네시아·메르코수르와 새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호주와의 협정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중국 외의 대안에서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원문은 이를 뜻이 맞는 다른 상대와의 협상 본보기로 들었다.
2	새로운 이행 방식 — 2026년 5월 멕시코와 잠정 무역협정(iTA)과 범위가 더 넓은 현대화 글로벌협정(mGA)에 서명했다. iTA는 EU 배타적 권한 영역이어서 EU 차원 비준만으로 더 빨리 발효하고, mGA는 회원국별 비준도 필요하다. 이런 'EU 단독 협정'의 활용을 원문은 '무역정책에서 속도와 시급성을 점점 더 중시하는 흐름'으로 적었다
3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함께 건다 — 호주·인도의 경우 무역 협상과 별도의 안보·방위 파트너십 협정이 나란히 진행됐다. EU는 2024년부터 2026년 5월까지 12개국과 이런 협정을 맺었다(원문은 나라 이름을 적지 않았다). 범위는 재래식 군사협력을 넘어 핵심 인프라 보호·사이버보안·해양안보까지 걸친다
4	연합 기반 무역 거버넌스 — 양자 협정망과 나란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캐나다·일본·멕시코 등)과의 병행 트랙을 추진한다. 성사되면 39개 경제, 세계 교역의 약 40%를 아우르게 되며 원문은 이를 '뜻이 맞는 나라들의 연합'으로 불렀다. 디지털 무역·공급망 회복력·무역투자 원활화의 공통 접근이 초점이다. 아프리카와의 관계 확대도 전략적 우선순위로 적고 2026년 4월 EU-AfCFTA 사무국 양해각서를 들었다

원문 94~95쪽. 도내 값(2023년 조사, 225개 모수) — 수출 희망 지역은 미정 88.4%·아시아 11.1%, 유럽·북미·남미 각 0.4%다.

VI 전략적 동맹

역외투자 — 글로벌게이트웨이 (원문 99쪽 4장 그림 1)

- EU의 대표 역외투자 프로그램인 **글로벌게이트웨이**는 첫 5년간 **3,000억 유로** 넘게 동원해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했고 2027년까지 4,000억 유로** 초과를 새 목표로 삼았다. 원문은 이를 더 **효과적인 전략 파트너십 플랫폼으로** 만들되 **「기업에 더 분명한 가치」**를 줘야 한다고 적었다.
- 지역별 동원액(2021~2024년, 총 **3,068억 달러**, 이하 반올림)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00억, 중동·북아프리카 772억, 아시아·태평양 479억, 중남미·카리브 315억, 동방 285억, 서발칸 270억, 글로벌 148억 달러**(* 본문은 유로, 그림은 달러 표기)

업종별 분석 · 핵심원자재 (원문 103~106쪽)

- 유럽은 **세계 금속의 25~30%**를 쓰지만 **역내 채광은 세계 생산의 약 3%**다. 대다수 핵심원자재에 대해 유럽감사원은 **“EU는 역외 수입에 의존한다. 그 가운데 10개 품목은 전면 의존한다”**고 적었다.
- 품목별로는 **중희토류 100%**를 중국, **니오븀 92%**를 브라질, **리튬 79%**를 칠레에 의존한다. 희토류 가치사슬의 **중류(채굴과 최종 제품 사이의 정제·가공 단계)**에서는 한 곳이 **세계 정제 역량의 90% 이상**과 관련 지식재산을 함께 갖고 있다 — 원문이 든 값이다. 코발트·구리·니켈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의존은 정제·정련보다 채굴 단계에 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이 적은 위험	원문이 적은 대응안
불확실한 수요 신호와 가격 변동이 채굴 투자를 막고 공급 집중을 굳힌다	바이어 클럽 — 수요 신호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구매력을 모으며 뜻이 맞는 상대와 조달 공통 기준 을 세우는 방식(원문은 이 행을 물음표로 닫았다).
공급 교란·수출 제한·가격 충격이 하류 산업을 멈출 수 있다	광물 비축 — 동맹국과의 공동 비축이나 전략 비축. 유럽은 원자재 메커니즘으로 역내에서 시작했으나 원문은 비축이 비싼 선택으로 남아 있다 고 함께 적었다
공급원을 다변화하면서 자원 보유국과 가치를 나눌 필요가 있다	「강화된」 무역협정 — 단순 채굴 계약을 넘어 기술 이전, 현지 정제·가공 역량 투자, 무역 인프라, 순환성·대체기술 가속까지 담는 협정
유럽의 중류(정제·가공) 역량 부족 과 중국의 우위가 구조적 취약점이며, 시장의 힘만으로는 메워지기 어렵다	중류 기술을 확보할 금융·위험분산 장치 와 공공·민간 협력 심화. 원문은 유럽 밖 핵심광물 대형사업 투자 를 새 금융수단과 거버넌스 구조가 맡을 일로 들었다

위 표는 원문 106쪽이며 **대응안은 원문이 「검토할 만한 선택지」로 적은 것이다**. 지정된 **역외 전략사업 13건**에 총 **55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값을 실었다. **원자재 메커니즘**(2026년 4월 출범한 집계 플랫폼)과 **유럽 핵심원자재 센터**도 함께 들었다(103~104쪽).

☞ 개별 정책보다 묶는 힘 (원문 107쪽)

- “결국 유럽의 경쟁력과 경제안보는 **개별 정책 영역보다 그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나로 묶느냐**에 달려 있다.”

결론이 적은 LGC의 다음 세 가지 (원문 108쪽)

- 이미 작동하는 것을 확대한다 — **바이어 연합, 공동조달, 자동가입 연금, 위험분산 장치** 같은 검증된 모형을 각국 사정에 맞춰 키운다.
- 다자 조율 플랫폼을 깊게 한다 — 기업·EU 기관·회원국의 구조화된 참여를 네 축에서 만들어 의견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되게 한다.
- 야심 말고 이행을 추적한다 — 드라기 권고에 쓰인 것과 비슷한 **가벼운 모니터링 장치**로 진전과 공백이 일찍 보이게 한다.

VII 원문에 한국이 나오는 자리

여기부터가 이 브리프의 시사점이다. 앞의 여섯 장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이 장은 원문에서 한국이 어디에 나오는지와 **도내 기업 독자가 표시해 둘 만한 대목**을 모은 것이다.

한국이 나오는 세 자리

AI 가치사슬의 설비투자·연구개발 몫 (2022~2025년, 각 지역 기업 전체 가치 가운데 AI 가치사슬 몫 — 네 값의 합은 100이 아니다)



원문 45쪽 2장 그림 7 · 출처 표기는 McKinsey Value Intelligence · MGI 분석

「Korea」는 보고서 전체에 세 번 나오고 모두 「South Korea」다 — 94쪽(미국·중국을 뺀 유럽의 최대 교역 상대 여섯: 브라질·인도·일본·멕시코·대한민국·튀르키예), 21쪽과 위 45쪽의 국가 비교 항목. 한국을 주제로 서술한 대목은 없고 원문은 한국을 일본과 한 묶음으로 놓았다. 같은 그림의 다른 두 계열은 값 순위가 다르다 — 같은 배열로 시가총액 몫 18·15·12·4%, 매출 몫 5·3·3·1%이며 매출은 두 지역이 같다. AI 가치사슬은 반도체·클라우드 서비스·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정의했다. 원문이 이름을 들어 적은 기업 가운데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ASML」로 본문·미주에 8회다.

도내 기업 독자가 표시해 둘 만한 대목

㉠ 기업 시사점 — 유럽과 거래하거나 유럽 시장을 보는 쪽

- 드라기 권고의 20%는 기업·산업 주도로 분류됐다(IV장 8면). 그 목록에 산업 컨소시엄을 통한 국경 간 표준화와 공급망 다변화가 들어 있다 — 유럽 파트너와의 논의에서 근거로 인용될 수 있는 틀이다.
- 공공조달이 연 약 2조 유로, EU 국내총생산의 약 14%(IV장 8면). 원문은 이를 혁신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다섯째 해법에 올렸고, 상용화 전 조달을 공공·민간 공동 항목에 두었다.
- 「강화된 무역협정」에 기술 이전과 현지 경제·가공 역량 투자가 들어 있다(VI장 12면). 핵심원자재를 다루는 기업은 유럽이 협정에 무엇을 넣으려 하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는 PCI 지정 여부로 약 3년 6개월과 7~10년으로 갈린다(III장 5·6면). 유럽 현지 설비·법인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사업 일정을 팔 때 이 차이를 넣어 둘 수 있다. 자본비용 인하도 III장의 여섯 해법에 들어 있다.
- 산업가속법(IAA)의 요건을 「유럽산」으로 할지 「유럽과 함께 만든 것」으로 할지가 아직 갈려 있다.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낸 안은 공공조달·보조금·시장 접근을 저탄소 및 현지 조달 요건에 연결하는 유럽산 우선 구매 선호를 담았다. 원문은 핵심 질문을 「유럽에서 만든 것」이나 자유무역협정 상대를 포함하는 「유럽과 함께 만든 것」이냐로 적었다(원문 96쪽).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답은 아직 없다.

이 브리프의 확인 범위 — 원문 PDF 123쪽 전문을 직접 대조했다. 인용문은 원문을 국문으로 옮기고 쪽수를 함께 적었으며 생략은 말줄임표로 표시했다. 값이 어긋나는 대목은 본문에 그대로 적었다. 발행 전 수치·출처, 논리·서사, 팀 규칙, 독자 시점 내 관점으로 내부 교차검수(레드팀)를 거쳤다. 이 브리프의 시사점은 공개 자료에 근거한 정리로, 특정 기관의 확정 계획이나 정책 제안이 아니다. 이 브리프는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을 권유하지 않는다 — V장의 수익률·세제 수치는 원문이 유럽 제도를 설명하며 적은 값이다. 자료 조사와 초안 정리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 도구로 활용했고, 인용한 수치·문장은 모두 원문과 대조했다.

* 용어 설명

드라기 보고서 —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2024년에 낸 「유럽 경쟁력의 미래」 권고가 약 380건이며, 원문은 그 권고의 **이행 정도와 이행 주제 분류**를 여러 곳에서 근거로 쓴다(II장 4면·III장 6면·IV장 8면).

레타 보고서 —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단일시장에 관해 낸 보고서. 드라기 보고서와 함께 **진단의 합의**를 만든 문서로 원문이 서론에서 언급한다.

LGC — Leaders for European Growth and Competitiveness. 2025년 출범한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이며 원문의 발행 주체다. 네 개 축(청정·경쟁력 있는 에너지와 산업 / 지능의 시대 / 금융시장 / 전략적 동맹)으로 나뉜다.

28번째 제도(28th Regime) — 27개 회원국 각각의 법제와 **별도로 두는 선택 가능한 유럽 단위 회사법 틀**. 설립·자금조달·임직원 주식보상에서 「27개 규정집」의 부담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인데 원문이 적었다(IV장 8면).

저축·투자 동맹(SIU) —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유럽의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잇기 위한 EU 차원의 전략. 증권화·리테일 참여·금융이해력·연금·시장통합·은행 경쟁력을 포괄한다 — V장 9~10면의 배경에 해당한다.

증권화(securitization) — 대출을 묶어 투자자에게 파는 증권으로 바꾸는 것. 은행이 위험을 넘기고 그만큼의 자본을 다시 대출에 쓸 수 있게 된다. 원문은 유럽 시장이 **아직 덜 발달했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동가입(auto-enrolment) — 연금에 **들러면 신청해야 하던 것을, 빠지려면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뒤집은 제도. 영국이 2012년에 도입했고 약 90%가 그대로 남았다(V장 10면).

드라기 옵서버토리 — 드라기 보고서 권고의 **이행 상황을 추적하는 관측 사업**. 이 호의 대표 수치인 **이행 15.7%(60건)**의 출처로 원문이 밝힌 곳이다(III장 6면).

REPowerEU — 2022년 EU가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에너지 계획.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이 **45%에서 13%로** 낮아진 결과로 원문은 든 정책이다(III장 5~6면).

삼자 플랫폼(tripartite platform) — 수요(구매자)·공급(산업)·지원 정책(정부·규제) 세 축을 한자리에서 맞추는 조율 장치. 원문은 해상풍력과 에너지저장에 이미 쓰이는 예로 들었다(III장 5~6면).

Apply AI 전략 — EU가 업종별 AI 도입을 앞당기려 2025년 10월 내놓은 10억 유로 규모 전략. 원문은 대상을 **11개 업종**으로 한정했다(IV장 7면).

데카콘 —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 유니콘(10억 달러 이상)의 위 단계다(IV장 8면).

글로벌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 EU의 대표 역외투자 프로그램. 첫 5년간 3,000억 유로 넘게 동원했고 2027년까지 4,000억 유로 초과를 목표로 한다(VI장 12면).

IPCEI — 유럽 공동이익의 주요 프로젝트. 여러 회원국이 함께 대형 산업·기술 사업에 공적 지원을 넣는 틀이며, 원문은 이를 **공공·민간 공동 권고**의 예로 들었다(IV장 8면).

중류(midstream) — 광물 가치사슬에서 채굴(상류)과 최종 제품(하류) 사이의 **정제·가공** 단계. 원문은 유럽의 중류 역량 부족과 중국의 우위를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았다(VI장 12면).

극자외선 노광(EUV lithography) — 아주 짧은 파장의 빛으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공정과 그 장비. 원문은 이 분야 세계 점유를 **100%로** 적고 괄호에 「ASML 독점」이라고 덧붙였다(IV장 7면).

TEN-E · 공동관심사업(PCI) — 유럽 에너지 인프라 규정과 그 틀에서 지정하는 역내 연계 사업. 지정되면 인허가가 **약 3년 6개월**에 끝난다고 원문이 적었다(III장 5·6면).

산업가속법(IAA) —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낸 안. **공공조달·보조금·시장 접근을 저탄소 및 현지 조달 요건에 연결하는 유럽산 우선 구매(Buy European)** 선호를 담았다(VII장 13면).

원자재 메커니즘 · 유럽 핵심원자재 센터 — 2026년 4월 출범한 집계 플랫폼과, 시장정보·공동구매·비축·사업 모니터링을 맡도록 설립이 추진되는 기구(VI장 12면).

FASTER 지침 — 2024년 12월 채택된 EU 지침. 국경 간 투자자의 **원천징수세 환급**을 빠르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V장 10면).

전력구매계약(PPA) · 차액계약(CfD) — 발전사업자와 구매자가 장기 가격을 미리 정하는 계약과,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 원문은 둘을 **사업 성립성을 높이는 장치**로 두었다(III장 5면 해법 5).

균등화발전원가(LCOE) — 발전설비가 수명 동안 만들어 내는 전력의 단위당 평균 비용. 서로 다른 발전원을 견줄 때 쓴다(III장 6면).

* 출처 (Sources)

- 원문 — World Economic Forum, 「Leaders for European Growth and Competitiveness」, First Edition, Annual Report, **2026년 9월, 123쪽**. 1장 Accenture·2장 McKinsey·3장 Oliver Wyman 협업. 공동의장 11인, 참여 리더 100명 가까이. **PDF 생성일과 발행처 게시일 모두 2026년 9월 9일**. (원문 PDF 전문 직접 대조)
weforum.org/publications/leaders-for-european-growth-and-competitiveness-1st-edition-2026/
- 이 브리프가 옮긴 원문 대목 — **3~10 · 18 · 21 · 27~38 · 40 · 45~48 · 54 · 56~57 · 59~60 · 63~64 · 71~89 · 91~96 · 99 · 103~108쪽**(표제지·서문·요약·서론, 1장 8~32쪽, 2장 33~55쪽, 3장 56~89쪽, 4장 90~107쪽, 결론 108쪽 가운데 인용한 자리)
- 원문이 인용한 자료 가운데 이 브리프가 함께 옮긴 것 — Draghi, M. (2024)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권고 약 380건, 이행 15.7%-60건은 드라기 옵서버토리 기준) / McKinsey & World Economic Forum (2025) 「Europe in the Intelligent Age: From Ideas to Action」(여덟 해법) /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KW, 2026) 「Joint Offshore Wind Investment Plan for the North Seas」(북해 해상풍력) / 2장 그림 2·3의 출처 표기(Eurostat · MGI · 미국 국립과학재단 · 유럽중앙은행 · EFPIA · ASML · Bruegel · PitchBook). 원문이 각주로 밝힌 값을 그대로 옮겼고 이 브리프가 각 원자료를 따로 검증하지 않았다.
- 원문 안에서 표기가 같린 대목 — 드라기 권고 이행 정도를 1장은 **15.7%(60건)**, 결론은 「**3분의 1 미만**」으로 적었다. 이 브리프는 출처가 적힌 1장 값을 쓰고 그 사실을 II장 4면에 실었다. 2장 그림 2의 모수 표기 차이는 IV장 7면에 있다.
- 이 브리프가 옮기지 않은 것 — **3장 스포트라이트 6건 가운데 4건**·미주 278개·기여자 명단·**3장 그림 1**의 항목별 배분과 **3장 그림 7**(금융채널별 배분). 두 그림은 항목과 값의 1:1 대응을 확정하지 못해 옮기지 않았다.
- 도내 값 출처 — 「경기도 반도체산업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GBSA Policy Focus Vol.05, 2024년 9월, ISSN 2671-681X). 원자료는 **2023년 경기도 반도체산업 실태조사** — 표본 **1,000개 업체**, 조사기간 2023. 10. 30.~11. 30., 신뢰수준 95%에서 ±3.0%P. 수출 희망 지역은 수출 계획이 있다고 답한 **225개가 모수**(전체의 22.5%)이며 복수응답이고, 수출 과정 애로사항은 **1,000개가 모수**인 복수응답이다. 업종 93.5%와 전담 인력 5인 미만 76.7%는 응답자 특성표, 기업연구소 48.3%는 기업부설연구소 32.1%와 연구개발전담부서 16.2%의 합이다. **조사 시점이 2023년 가을이므로 이후 EU 규제 환경의 변화는 반영돼 있지 않다** — VI장 11면의 도내 값은 그 시점의 값이다. 이 조사의 발행처는 이 브리프의 발행처와 같은 기관이다.
- 저작권 — 원문의 저작권은 World Economic Forum에 있다(© 2026 World Economic Forum). 원문의 **그림·표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고 표지 이미지는 출처를 밝혀 실었다**. World Economic Forum은 이 브리프의 작성·검수에 관여하지 않았다. 각 장의 논지와 핵심 수치를 정리하고 일부 문장을 출처와 함께 인용해 소개한 것이며, 전체 내용은 위 주수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